

산업화 정책 희생양...벼랑끝 농촌 지킬 확실한 대안

도입 목소리 커지는 농민기본소득제
고령화, 인구·소득감소 소멸 위기
의원 66명 ‘월 30만원’ 법안 발의
인구·부동산·환경...1석 3조 효과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 소득 감소라는 삼중고 속에 농촌 공동체 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 정당, 생협, 귀농운동본부 등은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를 조직해 “무너진 농촌과 농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을 지키는 확실한 정책 대안”이라며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의원 66명이 공동으로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제출하면서 제도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농민기

본소득법안을 지난 6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김원이·김희재·민형배·서동용·소병철·신정훈·윤영덕·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등 지역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한 의원 6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심상정, 류호정 의원도 법안 발의에 가세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농업·농촌은 식량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농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농민기본소득 수급권자 범위(제13조)에 대해 ‘농민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 농립

축산업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연 60만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농가에 농민이 2명이면 2명 모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시기와 방법, 액수(제18조) 등에 대해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매월 3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만 주도록 했다. 지급 하한액을 법률로 못 박은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민단체와 농촌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농업·농

촌 위기는 정부 주도의 도심 중심 산업 육성과 선부른 농정 개방 정책 등 농정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농어촌활력연구실 연구위원은 “전남에서 시작돼 전국에 확산 중인 농민수당제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직불금 제도 정비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마련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7월 6일자 광주일보 기고에서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금, (농촌·농민 기본소득제) 소득이 보장되지만 한다면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구의 유입은 교육·의료 등 인프라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와해되던 농촌 커뮤니티도 살려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농민기본소득제를 넘어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농민수당이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지급 대상으로 삼

는다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정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농촌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농민 스스로 자신의 소득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농민은 기본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만 번지르르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농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고 있다”고 농정당국을 직격했다.

박 실장은 “농민 인구는 농촌 인구의 4분의 1수 준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에 살며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지만,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적정인구가 유지된다면 각종 재해와 무분별한 개발에서 농촌을 지켜내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해 다가올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농촌과 도시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글>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본회의 문턱만 남은 언론중재법

숨고르기 vs 배수진...여야 전열 재정비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30일로 연기
민주 “8월내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 “모든 투쟁수단 동원”

정법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0일로 연기되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일단 전선을 한발씩 뒤로 물리며 전열을 재정비했으나 현재로서는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여 폭풍전야 상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에서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 전원법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적전본영을 피하기 위해 내부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 새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견이 그대로 노출된 데 이어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계속됐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법안이 수정 과정에서) 약화했다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전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총력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일단 본회의 연기로 시간을 번 만큼, 원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측의 전원위 소집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메시지 전달도 잘 안 되고 실리가 없다”며 “전반 토론에 집중하자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엇갈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대선 후보들, 지방자치 완성 공동선언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권한 배분과 재정 및 조직 분권이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이 모여 국가적 과제로 이를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 기획해 이날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

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국민 원탁회의’에 광역도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권한의 배분, 예산의 뒷받침, 인력 및 조직의 구성권까지 지방으로 온전히 내려와야 한다”며 사무분권, 재정분권, 조직분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1, 2단계 재

정분권이 충분하지 않지만,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며 “그러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후보 간 특별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적 과제에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현제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